

# ‘망각(忘却)’과 ‘비등(沸騰)’의 공존\*

– ‘여순 10·19사건’ 이후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기억투쟁’ 고찰

예 대 열\*\*

1. 머리말
2. ‘비국민’에서 ‘국민’이 되기 위한 진입로의 부재
3. 반역과 통곡의 세월, 잠들지 않았던 남도
  - 1) 투표를 통한 민심의 표출과 심판
  - 2) 대항 기억의 창출과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의 힘
4. 맺음말

## 국문초록

‘제주 4·3사건 특별법’은 1999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2021년 제정되었다. 이 시간의 격차는 제주와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기억투쟁’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향한 대장정은 민주화운동과 궤를 같이하지만, 그 계기는 1960년 4·19와 1980년 5·18의 시간만큼 20여 년의 차이가 난다. 본 논문은 여순사건 이후부터 1980년대 진상규명 운동이 벌어지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기억투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3485).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dyyea@hanmail.net

재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과거 역사 속 ‘객관’과 ‘의지’를 통해 구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여순사건을 자의건 타의건 ‘망각(忘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끓는 점을 향해 항시 ‘비등(沸騰)’해 왔다.

주제어 : ‘제주·4.3 사건’, ‘여순 10·19 사건’, 국민 만들기, 대항기억, 구술

## 1. 머리말

‘제주 4·3사건 특별법’은 1999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2021년 제정되었다. 이 시간의 격차는 제주와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기억투쟁’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향한 대장정은 민주화운동과 궤를 같이하지만, 그 계기는 1960년 4·19와 1980년 5·18의 시간만큼 20여 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주에서는 4·3 진상규명에 관한 움직임이 4·19혁명 직후 처음으로 등장했다. 제주대 학생 7명으로 구성된 ‘4·3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는 1960년 5월 26일자 『제주신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과도정부가 4·3사건 시 양민학살, 방화 등 모든 야만적 행위를 규명하여 도민의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것이 제주 4·3 진상규명 운동의 첫 시작이었다.<sup>1)</sup>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분위기하에서였다. 1988년 11월 24일 지리산 기슭 구례군 산동면 달전부락 주민들은 38년 만에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며 세상에 자신들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1948년 11월 이 마을에 살고 있

1)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215쪽.

던 18~35살 젊은이들은 14연대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모두 학살당했다. 그 가족들은 “언젠가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랬지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살았다”며 명예가 회복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염원을 드러냈다.<sup>2)</sup>

이 시기 여수에서는 여수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순반란’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순천에서도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가 중심이 되어 관련자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진상규명 운동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사연)’가 피학살자 실태를 조사하면서 착수되었다. ‘여사연’은 여순사건이 지역 내에서만 벌어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는 관점하에 이슈를 전국화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운동과 헌신에 힘입어 2022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효되었고 현재 ‘여순사건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본 논문은 여순사건 이후부터 1980년대 지역에서 진상규명 운동이 벌어지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기억투쟁’을 고찰한다. ‘제주 4·3’과 ‘여순 10·19’는 쌍둥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과정을 비롯하여 학계의 연구 성과 등 객관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여순 10·19’가 ‘제주 4·3’과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 물론 ‘제주 4·3’ 또한 무장대의 희생자 배제, 봉기 참여 대중들의 ‘비주체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sup>4)</sup> 그럼에도 그 선례를 반면

2) 「“6·25 때 학살된 양민 명예 회복을”」, 『한겨레』 1988.11.30.

3) 이영일, 「지역운동과 여순사건」, 9쪽(여수지역사회연구소 홈페이지(yosuicc.com) 자료실).

4) ‘제주 4·3’ 과거사 청산이 갖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는 고성만, 「4·3위원회의 기념 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82, 2008; 고성만, 「4·3 과거청산과 ‘희생자’-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탐라문화』 38, 2011; 고성만, 「4·3 ‘희생자’의 변용과 활용—무장대 출신자의 과거청산 경험을 사례로」, 『사회와역사』 129, 2021; 김민환, 「전장(戰場)이 된 제주 4·3평화공원—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과 분열된 연대」, 『경제와 사회』 102, 2014; 이재승, 「묘지의 정치—명예회복과 인정투쟁을 둘러싸고」, 『통일인문학』 68, 2016 등 참조.

교사 삼아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전남 동부 지역민들은 한편에서는 여순사건을 자의건 타의건 ‘망각(忘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끓는점을 향해 항시 ‘비등(沸騰)’해 왔다. 그것에 대한 검출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비국민’에서 ‘국민’이 되기 위한 진입로의 부재

1948년은 대한민국이 일제와 미군정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민국가를 만들어가는 첫 해였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 하에서 정치적 대립을 겪은 ‘인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키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닌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국민국가 건설에 나섰다. 이승만 정부는 남북의 대치와 인민의 지지가 미약한 조건에서 외부의 적대적인 타자를 ‘적’으로 설정하며 대중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런데 내부 통합을 위한 외부의 ‘적’ 만들기는 38선 너머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냉전체제의 하위구조인 분단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외부와의 경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외부의 ‘적’ 만들기는 내부로 연결되어 한편으로는 ‘국민’이라는 집단적인 동일성을 만들어 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과 배제에 의한 ‘비국민’을 양산해 냈다.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는 내부의 일상 속에 내재한 불온한 것들을 타자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과 ‘여순 10·19’를 내부의 ‘적’을 폭로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공식적으로 설정한 ‘적’인 북한 대신 봉기한 지역주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며, 누가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심사’했다. 반란의 주체들과 협력자들은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학살을 통해 절멸되었다. 이들이 사라진 연후에야 대한민국은 온전한 ‘반공국가’가 될 수 있었고, 대중들은 비로소 ‘반공국민’이 될 수 있었다.<sup>5)</sup>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政體)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와 여순에 가해진 국가폭력은 국가의 수립과 국민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제주 4·3’과 ‘여순 10·19’는 사건 이후 진상규명 운동 과정이 사뭇 달랐다. ‘제주 4·3’은 섬 전체에 걸친 장기간의 집단 경험이었다면, ‘여순 10·19’는 단기간에 전남 동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단절된 경험이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민은 4·3사건 문제를 지역 전체의 공동체적 해결과제로 인식해 왔다. 4·3 문제의 해결은 4·19 이후 또는 1980년대 민주항쟁의 한복판에서 매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독재 청산 못지않은 현안으로 부각 되었다.<sup>6)</sup>

반면 여순사건의 해결 과정은 ‘반란’이라는 굴레와 지역민들의 의식적 ‘망각’으로 인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지역민들에게 가슴 속에 묻어버리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였고 콤플렉스였다. 1980년대 말 여순문화원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며 제기했던 것은 ‘여순반란’ 대신 ‘14연대 반란’으로 명칭을 바꿔 쓰자는 운동이었다.<sup>7)</sup> 진상규명 운동의 첫 시작이 14연대와 지역민의 분리였다는 점은 주민들이 갖고 있던 피해의식의 정도를 헤아릴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제주 4·3’과 ‘여순 10·19’가 사건의 성격상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국가폭력에 의한 ‘비국민화 전략의 피해자(지역)’라는 공통점에서 불구하고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물론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존재했고,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과 육지라는 차이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용적으로 봉기의 주체가 민간인과 군인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5)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577쪽.  
 6) 박찬식,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여순사건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2008, 106-107쪽.  
 7) 홍영기, 「여순사건 당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 현황—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선 10·19』 5,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2, 72쪽.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두 사건이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었을까?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전남 동부지역은 물론 진압 중인 제주도에 대해서도 ‘반란’의 연장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방부는 “제주도에는 의연히 반도가 지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남 여수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8)</sup>

그렇다면 양 사건 사이 진상규명 운동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다음은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한 단락이다.

때마침 6·25가 터져 해병대 모병이 있자 이 귀순자들은 너도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그야말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있다가 언제 개죽음당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모 형은 인천상륙작전을 참가한 해병대 3기였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용맹을 떨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용맹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따지고 보면 결국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인지라 한번 여봐라는 듯이 용맹을 떨쳐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sup>9)</sup>

위의 소설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에서는 입대 선풍이 불었다. 마침 해병대사령부가 4·3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주둔해 있었고, 그 와중에 전쟁이 발발하자 도내 청년들이 대거 입대를 자원했다. 해병대에 들어간 청년들은 유격대의 가족이거나 보복 학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입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10)</sup> 그들 중에는 진압 과정에서 박힌 총알을 제거하지도 못한 채 해병대에 자원한 청년도 있었다.<sup>11)</sup> 제주

8) 「濟州島依然騷亂，軍當局近日掃蕩作戰開始乎」, 『國際新聞』 1948.10.28.

9)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비평사, 1979, 69-70쪽.

10) 양정심, 앞의 책, 197쪽.

1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3, 386-387쪽.

도민들은 생존을 위해 ‘빨갱이’ 폭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순수한 ‘국민’임을 스스로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제주도 청년들은 해병대 3기와 4기로 입대해 인천상륙작전의 주역이 되었고, 9·28 서울 수복을 비롯하여 도솔산 전투와 편치불 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병대의 ‘전설’이 된 제주 청년들은 더 이상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반란’의 주역이 아니라, 전쟁의 참화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sup>12)</sup> 제주도 해병대원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1960년 4월 15일 동문 로터리에 “海兵魂”이라고 새겨진 기념탑을 세웠다.

그로부터 며칠 후 4·19가 벌어졌다. 1960년 5월 26일 제주대 학생들이 『제주신보』에 4·3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해병대 기념탑 제막식과 제주대 학생들의 진상규명 요구 사이의 간격은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이념의 극단에서 있을 것만 같은 해병대원과 운동권 학생들은 사실 ‘제주 4·3’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집단이었다. 비슷한 나이였을 두 청년집단은 4·3 당시 한라산 기슭 어디에선가 토벌대를 피해 함께 숨어지내던 친구였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경험 때문일까, 제주도 지역사회에서는 4·3사건 해결을 위한 이념적 갈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반면 전남 동부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곧바로 인민군 점령하에 놓였다. 인민군은 개전 직후 파죽지세로 남하해 1950년 7월 23일 광주, 25일 순천, 26일 여수를 각각 점령했다. 그러자 여순사건을 일으킨 후 지리산 등지에 숨어있던 14연대 봉기군과 지방 좌익들이 인민군과 결합했다. 전라도 지역은 9월 말~10월 초 수복이 될 때까지 약 2개월 간 인민군의 치하에 놓였고, 이후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민군과 좌익들은 다시 산악지대로 입산해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보통 대 게릴라전의 경우 ‘비민분리(匪民分離)’ 정책이 작전의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당시 국군의 토벌과정을 보면 작전대상에 빨치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민들은 빨치산 토벌과정과 정

12) 「4·3 광풍 2년 뒤 해병대 입대한 도민 3,000명의 전설」, 『제주일보』 2022.8.27.

부 시책에 협조하며 스스로 ‘반공국민’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다.<sup>13)</sup> 물론 여순사건 관련 지역에서도 제주도 출신 해병대원들처럼 ‘국민’이 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sup>14)</sup> 하지만 제주도는 그 선택이 집단적이었고 전투가 섬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여순은 그 선택이 개별적이었고 전투의 참여가 같은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제주도의 경우 한국전쟁이 육지에서 벌어지면서 일부나마 ‘비국민’에서 ‘국민’이 되기 위한 진입로가 열려 있었다면, 전남 동부지역은 여순사건 이후 (준)전시 상황을 거치며 ‘비국민’에서 ‘국민’이 되기 위한 진입로가 봉쇄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전남 동부 지역민들은 여순사건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 3. 반역과 통곡의 세월, 잠들지 않았던 남도

#### 1) 투표를 통한 민심의 표출과 심판

여순사건을 겪은 지역민들은 1980~1990년대 진상규명 운동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과거를 망각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의 여순사건에 대한 ‘기억투쟁’은 겉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물 밑에서 도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여순사건에 대한 집단적 ‘의지’가 처음 드러난 사건은 1963년 대선이었다.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

13) 임송자, 「전향의 반공주체 형성과 동원」, 『韓國史研究』 185, 2019, 229쪽.

14) 정지아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보면 ‘박선생’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빨치산 출신 아버지는 형과 누이가 모두 산에서 죽은 ‘박선생’이 군인이 되고 제대 후 평생 교련 선생으로 산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박선생’의 선택은 제주도 해병대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2022, 48-49쪽.



약속을 저버리고 1963년 대선에 나섰다. 이 선거에서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가 여순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사상논쟁을 제기했다. 윤보선은 1963년 9월 25일 여수 유세 이후 “나는 여수에서 여수반란사건의 관계자가 지금 정부에 있는 것을 상기했다”며 사상논쟁을 점화시켰다.<sup>15)</sup>

실제 여순사건 당시 박정희가 ‘군사 총책’으로서 남로당에 가입해 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가 반란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 당시에는 광주 반군토벌사령부에서 호남지구 작전참모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박정희는 숙군과정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후 무기징역과 파면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후 최종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박정희가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사 과정에서 군대 내 남로당 조직체계를 수사당국에 제공했기 때문이었다.<sup>16)</sup>

윤보선은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의 좌익 전력과 사상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했다.<sup>17)</sup> 그러나 선거 결과 박정희는 윤보선의 집요한 색깔 공세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박정희는 470만 2,640표(46.6%)를 얻었고, 윤보선은 454만 6,614표(45.1%)를 획득했다. 차이는 불과 156,026표밖에 되지 않았다. 박정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기본적으로 군정(軍政)과 공화당의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거둔 30만 표 차이의 대승과 해방 직후 좌익세력이 강했거나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 표가 많이 나왔던 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18)</sup> 실제 당시 『경향신문』은 “윤씨의 보루인 호남 표가 예상외로 박씨에게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것은 윤씨가 박씨를 ‘빨갱이’로 몰아친 데 기인한 것 같다. 과거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당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sup>19)</sup>

15) 「麗水叛亂事件 관계者 現政府에 있는 걸 想起」, 『朝鮮日報』 1963.9.25.

16) 김득중, 앞의 책, 448-449쪽.

17) 「“中立路線은 亡國, 나세르 讚揚하다니 안될 말”」, 『朝鮮日報』 1963.9.29; 「朴正熙候補 引責 등 主張」, 『朝鮮日報』 1963.10.1; 「말의 激流 … 입의 砲火」, 『朝鮮日報』 1963.10.6.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385쪽.

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과거 좌익 세가 강했거나 조봉암 표가 많이 나왔던 지역에서 박정희의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 3국장 김영민은 그 원인을 박정희가 제기한 연좌제 폐지 공약 때문이라고 보고했다.<sup>20)</sup> 또한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정구영과 야당총재 시절 김대중도 박정희의 승리가 사상논쟁으로 인한 호남 민심의 지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근소한 표 차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사상논쟁 탓이 아닌가 해 (...) 윤보선 씨 쪽의 민정당에서는 박정희 씨의 여순반란사건 관련설을 내세워 사상적으로 몰아붙였지 (...) 박정희 씨가 대구에서 (...) 연좌제 폐지를 공약했어 (...) 혁신계 사람들을 석방하겠다 (...) 그러니까 윤보선 씨 쪽은 박정희 씨와 공화당까지 사상적으로 의심된다는 유세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샀고, 공화당이 이걸 역이용할 수 있었지. 근소한 차이 나마 국민들이 윤보선 씨보다는 박정희 씨에게 표를 더 준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해.<sup>21)</sup>

윤보선 씨가 그때 실수한 것은 박정희 씨를 빨갱이로 몬 것입니다. 미군정 3년 동안 무고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반발해서 박 대통령을 밀어주었어요. 윤보선 후보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서 이겼어요. 남쪽에서만 졌지요. 경상도는 박 대통령 고향이라고 하지만 전라도에서 35만 표나 나왔어요. 그때 윤보선 씨에게 15만 표 차로 이겼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전라도 표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대통령 되자마자 전라도를 차별해서 우리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sup>22)</sup>

실제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앞섰던 지역은 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sup>23)</sup> 아울러 여순사건

19) 「勝因과 敗因, 共和黨의 경우」, 『京郷新聞』 1963.10.17.

20) 김경재, 『김형욱 회고록 -혁명과 이상-』 2, 전예원, 1991, 76-81쪽.

21) 李英石 編 『鄭求瑛 回顧錄 실패한 도전』, 中央日報社, 1987, 59쪽.

22) 趙甲濟, 「특별인터뷰 金大中 아태재단 이사장」, 『月刊朝鮮』 178, 월간조선사, 1995.1, 119-120쪽.

23) 손호철, 「1956년과 63년 대선 : 조봉암, 박정희 득표는 잔존 좌익의 지지였나?」,

관련 지역에서도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대부분 앞섰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여순사건 관련 지역 1963년 대선 개표 결과

| 시·군명 | 박정희    |        | 윤보선    |        |
|------|--------|--------|--------|--------|
|      | 득표수    | 득표율(%) | 득표수    | 득표율(%) |
| 여수시  | 13,263 | 39.8   | 18,469 | 55.4   |
| 순천시  | 14,615 | 52.7   | 11,860 | 42.8   |
| 구례군  | 16,930 | 58.8   | 9,584  | 33.3   |
| 광양군  | 21,211 | 59.5   | 11,996 | 33.7   |
| 여천군  | 39,782 | 71.5   | 12,423 | 22.3   |
| 승주군  | 32,537 | 59.8   | 17,433 | 32.0   |
| 고흥군  | 51,112 | 60.7   | 27,153 | 32.2   |
| 보성군  | 36,330 | 58.3   | 22,199 | 35.6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info.nec.go.kr).

위에서 보듯 1963년 대선 당시 여수시를 제외한 전남 동부 전 지역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대략 2:1 정도로 앞섰다. 당시 대중들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품은 응어리를 투표로 표현했다. 아울러 호남 기반의 야당이었지만 자신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않은 민정당과 윤보선에 대해서는 표로써 심판했다. 마음 한편에는 ‘빨갱이’로 몰린 박정희의 모습에 자신들을 투영하며 그가 구제하여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실제 앞서 서술했듯이 박정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혁신계에 가담했던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연좌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거 승리 이후에는 최고회의 의장 「지시각서」 제9호를 통해 내각 수반, 대법원장, 중앙정보부장에게 연좌제를 폐지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5·16 직후에 검거된 혁신 세력이나 4·19 후 어물어물 말려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애매하게 걸린 사람들이 있음 (...) 혁신계 정치범 중에서도 우파에 속하는 사람은 석방 대상에 들 것 (...) 가족 중에 월북한 사람이나

『현대한국정치』, 사회평론, 1995, 215쪽.

사상범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채용이 안 되거나 출세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될 일.<sup>24)</sup>

“공무원의 임면 결정에 있어서 본인 자신의 행위 이외에 친족 그 밖의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주게 하는 종래의 연좌주의를 지양하라(「지시각서」 제9호)” (….) 연좌제 신원조사 지양은 공무원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간인에도 적용되는 것.<sup>25)</sup>

사상논쟁의 여진은 1963년 11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연되었다. 11월 11일 윤보선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씨의 형 한 분이 대구 10·1폭동의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총살을 당했고 (….) 다른 형 하나는 현재 북한 괴뢰정권 밑에서 정보 관계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6)</sup> 총살을 당했다고 한 형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대구 10·1사건’의 주동자 박상희였다.

그런데 대선에서의 색깔론 여진 때문일까, 1963년 총선에서 여순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남지역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보성군을 제외하고 박정희의 공화당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호남지역인 광주, 목포, 화순·곡성, 영암·강진, 해남, 나주 등에서 야당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물론 공화당의 여순지역 승리 이면에는 1962년 여름 수해와 흉작 피해로 인한 군사정부의 복구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은 이 지역에서 수해복구 사업 당시 보여준 군사정부의 업적을 과시하는 전략으로 선거운동에 임했다.<sup>27)</sup> 그런데 공화당이 선거 직전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밀가루를 호남지역 전체에 살포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sup>28)</sup> 같

24) 「“右派革新系 석방” 共和黨 朴正熙 후보 言明, 『東亞日報』 1963.10.12.

25) 「朴議長, 連坐主義 止揚 지시, 『京鄉新聞』 1963.12.11.

26) 「“朴正熙氏의 親兄 한 분 北傀情報責으로 있다” 尹氏 主張, 『朝鮮日報』 1963.11.12.

27) 강성호, 「1950~60년대 순천의 지역정치와 6·8부정선거 규탄운동, 『남도문화연구』 40, 2020, 243쪽; 광경상, 「근현대 시기 순천의 성장과 도시계획의 전환, 『學林』 48, 2021, 610쪽.

28) 「흐려지는 總選終盤戰, 돈 權力 不正 등 亂舞, 『東亞日報』 1963.11.22.

은 전남권에서 선거 결과가 갈린 것은 사상논쟁 이면에 흐르고 있던 지역 내 정서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여순사건 관련 지역 1963년 총선 개표 결과

| 시·군명    | 정당    | 이름  | 득표수    | 득표율(%) | 비고 |
|---------|-------|-----|--------|--------|----|
| 여수시·여천군 | 민주공화당 | 이우현 | 34,641 | 44.4   | 당선 |
|         | 자유민주당 | 이은태 | 22,933 | 29.4   |    |
| 순천시·승주군 | 민주공화당 | 조경한 | 26,898 | 36.4   | 당선 |
|         | 민주당   | 조연하 | 18,221 | 24.7   |    |
| 광양군·구례군 | 민주공화당 | 김선주 | 18,523 | 32.6   | 당선 |
|         | 국민의당  | 이갑식 | 16,242 | 28.6   |    |
| 고흥군     | 민주공화당 | 신형식 | 32,778 | 42.8   | 당선 |
|         | 국민의당  | 송경섭 | 17,006 | 22.2   |    |
| 보성군     | 민주공화당 | 이백래 | 16,597 | 34.6   | 당선 |
|         | 민정당   | 이정래 | 22,135 | 46.1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info.nec.go.kr).

결국 공화당은 1963년 11월 총선을 통해 재적의원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박정희는 민정 이양 이후에도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민간정부로 새롭게 탄생한 박정희 정권은 선거 당시 내세웠던 약속들을 저버리고 정치적 자유와 대중의 참여를 억압하는 통치 방식으로 나아갔다. 박정희를 정점으로 한 군부는 본격적으로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호남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실망감으로 변해갔다. 민심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데는 다음 대선인 1967년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1967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박정희와 윤보선이 다시 맞붙었다. 선거 결과 박정희 후보가 51.4%, 윤보선 후보가 40.9%를 획득하여 116만 표 차이로 박정희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sup>29)</sup> 하지만 호남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3만 표를 더 얻었다. 당시 선거에서 부정 시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sup>30)</sup> 윤보선의 호남 승리는 이

29) 「朴正熙 候補의 壓倒的 勝利」, 『京鄉新聞』 1967.5.4.

30) 「大統領選舉 때도 2百萬票 부정」, 『東亞日報』 1967.6.23.

전 대선과 비교하여 극적인 반전이였다.

이 선거에서 여순사건 관련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공화당은 전남 동부의 거점 도시인 순천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sup>31)</sup> 아래의 <표 3>에서 보듯 순천과 인접 지역인 승주군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고 그만큼 학살이 많이 벌어졌던 구례군<sup>32)</sup>과 보성군에서도 윤보선이 큰 표 차로 승리했다. 이러한 현상은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이 호남에서 점차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정희는 1963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연좌제 폐지 등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기정책 각 종 경제정책에서 호남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다.<sup>33)</sup> 그 결과 호남이 ‘저항 투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sup>34)</sup>

<표 3> 여순사건 관련 지역 1963년/1967년 대선 개표 결과 비교

| 시·군명 | 대선   | 박정희     |        | 윤보선     |        |
|------|------|---------|--------|---------|--------|
|      |      | 득표수     | 득표율(%) | 득표수     | 득표율(%) |
| 전라남도 | 1963 | 765,712 | 57.2   | 480,800 | 36.0   |
|      | 1967 | 652,847 | 44.6   | 682,622 | 46.6   |
| 여수시  | 1963 | 13,263  | 39.8   | 18,469  | 55.4   |
|      | 1967 | 17,802  | 48.8   | 16,616  | 45.6   |
| 순천시  | 1963 | 14,615  | 52.7   | 11,860  | 42.8   |
|      | 1967 | 13,158  | 44.7   | 14,723  | 50.0   |
| 구례군  | 1963 | 16,930  | 58.8   | 9,584   | 33.3   |
|      | 1967 | 13,381  | 44.7   | 14,540  | 48.5   |
| 광양군  | 1963 | 21,211  | 59.5   | 11,996  | 33.7   |
|      | 1967 | 18,679  | 51.0   | 14,847  | 40.6   |
| 여천군  | 1963 | 39,782  | 71.5   | 12,423  | 22.3   |
|      | 1967 | 32,536  | 55.0   | 21,202  | 35.8   |
| 승주군  | 1963 | 32,537  | 59.8   | 17,433  | 32.0   |
|      | 1967 | 23,534  | 41.4   | 29,014  | 51.0   |
| 고흥군  | 1963 | 51,112  | 60.7   | 27,153  | 32.2   |
|      | 1967 | 48,972  | 52.8   | 36,517  | 39.4   |

31) 「總選熱戰 現地報告(中) 湖南」, 『東亞日報』 1967.5.19.

32) 노영기, 「여순 사건과 구례-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주둔과 진압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8, 2005, 54쪽.

33) 「도사린 痼疾 ‘地域偏重’, 한 道에 50% 集中」, 『東亞日報』 1966.3.26.

34) 강성호, 앞의 논문, 244쪽.

| 시·군명 | 대선   | 박정희    |        | 윤보선    |        |
|------|------|--------|--------|--------|--------|
|      |      | 득표수    | 득표율(%) | 득표수    | 득표율(%) |
| 보성군  | 1963 | 36,330 | 58.3   | 22,199 | 35.6   |
|      | 1967 | 27,543 | 42.0   | 33,149 | 50.6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info.nec.go.kr).

이 시기를 전후하여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의식이 각성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1965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7년 ‘6·8 부정선거’ 규탄운동을 비롯하여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sup>35)</sup> 지역민들은 여순사건이 가져온 침묵과 망각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점차 민주적·민족적 의식에 대한 자각을 통해 진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여순사건이 공론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독재 권력에 침묵하고 지낸 것만은 아니었다. 비등점 아래에서는 여순사건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대항 기억의 창출과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의 힘

전남 동부 지역민들이 1960년대 박정희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투표로써 지지 혹은 심판한 것은 심연에 자리 잡고 있던 여순사건에 대한 작은 대항 기억들과 속삭임 속에 전해진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 직후부터 전남 동부지역을 ‘반란지구’로 설정하고 지역민에게 ‘빨갱이’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문인조사반’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을 파견하는 등 형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sup>36)</sup> 이에 대해 지역 내 향토사학자들은 국가의 일방적 선전과 매도에 맞서 기존 인식을 비틀고 작으나마 균열을 내기 위한 대항 기억들을 만들어 왔다.

지역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한 책은 1952년 여수교육

35) 같은 논문, 254쪽.

36) 김득중, 앞의 책, 402-405쪽; 주철희, 「여순항쟁의 왜곡과 반공문화—‘반란실정 문인조사반’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3, 2017, 193쪽.

청에서 발간한 『여수향토사』였다. 이 책의 집필자인 김낙원(金洛原)은 여순사건에 관해 ‘혈루사(血淚史)’라고 칭하며 ‘여순반란사건’이라는 명칭과 함께 ‘무자시월사변(戊子十月事變)’이라는 이름을 병기했다.<sup>37)</sup> 이를 두고 지역에서 오랜 기간 여순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온 주철희는 여수와 순천을 사건명에서 뺌으로써 “지역으로 고착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한 첫 시도라고 평가하였다.<sup>38)</sup>

김낙원은 1962년 『여수향토사』를 개정판 형태로 다시 출간하였다. 그는 1952년 초판을 내면서 이미 「서문」에 “수정보증(修正補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초판 출간 시점이 한국전쟁 중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자료의 발굴 외에도 “역사적 근거에 의빙(依憑)”<sup>39)</sup>해 서술하겠다는 사명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초판과 달리 개정판을 내면서 몇 가지 점에서 기존 국가가 공식화한 여순사건과 다른 입장을 제기하였다.

첫째, 김낙원은 국군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군의 진압전이 있으리라는 새로운 위협성에 대한 공포를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25일에는 시내에 잔류한 시민의 수효도 격감 되었으려니와 반도들도 극소수의 군인과 민간 협력자 및 명사 모르고 부화뇌동한 학생들만이 무질서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뿐이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 이 나라의 백성 쳐놓고 이 무슨 오욕이며 빠져리는 참변이랴 (...) 전시를 포위한 진압군은 기관총을 난사하며 공격 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시민을 닥치는 대로 몰아내고 민가를 살살이 수색하는 것이었다. (...) 27일이다. 시내를 완전 포위한 육군 부대는 시중(市中)을 향하여 총공격의 총불을 터뜨려 놓고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함정으로부터도 원호포탄을 퍼붓는 통에 전시(全市)는 바로 수라장 화 되었다. (...) 이것이 총포격과 화공 전쟁의 본연의 모습이다.<sup>40)</sup>

37) 金洛原, 『麗水郷土史』, 麗水教育廳, 1952, 44쪽.

38) 주철희, 「여순사건과 지역의 기억」, 『歷史學研究』 56, 2014, 217쪽.

39) 金洛原, 앞의 책, 9-10쪽.

40) 金洛原, 『麗水郷土史』, 郷土文化社, 1962, 68-71쪽.



당시 호남전투지구사령부는 1948년 10월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여수에 반란군 200명, 무장 폭도 1,000여 명, 동조 세력 12,000여 명이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sup>41)</sup> 그러나 후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당시 여수에 있던 지창수 휘하 14연대 봉기군은 본격적인 진압을 예감하고 이미 백운산과 별교 방면으로 이동한 상태였다.<sup>42)</sup> 즉 진압군이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 여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을 당시에는 시내에 극소수의 군인과 지방 좌익 및 일부 동조 세력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김낙원은 국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무차별적 진압을 감행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미국 임시군사고문단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봉기군이 섬진강을 거쳐 지리산으로 잠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하우스만(James H. Hausman)과 백선엽은 봉기군을 추격해 혹여 북한과 호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반면 임시군사고문단장이었던 로버츠(William L. Roberts)는 군에서 반란이 일어난 만큼 여수를 진압해 이승만 정부의 건재함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sup>44)</sup> 결국 로버츠의 뜻대로 여수 진압이 결정되었다.

둘째, 김낙원은 당시 정부가 여수 전체를 반란지역으로 몰아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죽음과 삶의 양극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순간이다. (...) 반란군은 진압되고 이로부터 가담자의 적발과 차단 단계로 들어갔다. (...) 소위 백두산 호랑이로 위명이 높은 김종원 사령관이 추상같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중앙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참수 즉결처분을 단행하던 것도 바로 이때이다. (...) 교정 북쪽의 교사(校舍) 뒤에서는 즉결처분의 총성이 무자비하게 들려 오고 교정 안에서는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기는 고문에 못 견디어 비명을

41) 「叛軍 主力은 男女學生, 靑少年 思想善導 時急」, 『東光新聞』 1948.10.29.

42) 김득중, 앞의 책, 262쪽;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3쪽.

43) 하우스만·정일화,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美軍 대위』, 한국문원, 1995, 185쪽.

44) 김득중, 앞의 책, 261쪽.

지르다 못해 신음하는 아우성 소리! (...) 이 같은 참변 속에서도 시민의 가슴을 더욱 태우게 한 이변이 있었으니 (...) 만성리 터널 넘에서 수다한 적 발자를 총살시킨 일이 그 하나다.<sup>45)</sup>

진압군은 여수에 진입하자 전 시민을 봉기군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적으로 설정했다. 시민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끌려와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심사’를 받았다. 협력자를 지목하는 일은 지역의 경찰과 우인 인사들이 맡았고, 이들이 가리킨 손가락 끝은 총으로 변해 한 사람의 생을 갈랐다. 색출의 과정은 기준도 없었고 자세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이 나쁘거나 개인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지목되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이 일본도를 휘둘렀고, 현재 ‘형제묘’가 자리 잡고 있는 만성리 언덕에서는 집단학살이 벌어졌다. 김낙원은 이 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여수를 온통 빨갱이 고장”으로 몰고, 시민 대다수를 향해 “최대의 증오와 적개심”으로 대했던 국가를 ‘고발’한 것이다.

셋째, 김낙원은 군 반란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가한 점을 비판하였다.

군인이 봉기하여 총칼로 민간인을 위협하고 이들을 강제시킨 줄을 알았다면 군인 자체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 반역을 미연 방지 못한 책임을 느끼므로써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친절과 동정심으로 접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이 입은 피해와 희생을 애공(哀矜)히 여겨야 할 것이거늘 진압군이나 수도 경찰대의 행동은 동족에 대한 아량이나 인민의 정은 고사하고 사랑과 인정을 찾아볼 수 없었 (...) 다는 것은 깊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46)</sup>

김낙원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군대 반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남 좌익이 ‘우선’ 봉기하고 일부 군인들이 합류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호도해서 선전했기 때문이었다. 이승

45) 金洛原, 앞의 책, 1962, 74쪽.

46) 같은 책, 74-75쪽.

만 정권은 이제 막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군내 내 반란이 자신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봉기의 핵심 주체를 군대가 아닌 전남 지역민에게 전가한 것이다.<sup>47)</sup> 실제 당시 김형원 공보처장은 여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수 14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군대의 반란을 일반은 알고 있으나, 실지 조사한 결과 오랜 시일을 두고 적색분자들이 계획적 조직적 음모를 해왔고, 10월 혁명을 계기로 일으키려 할 때 일부 군대가 민중에 호응한 것이다.<sup>48)</sup>

이승만 정부가 군대 반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 성격을 지역민에게 전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둬 사건 명칭이 ‘여순반란사건’으로 고착화 되는데 일조하였다. 1980년대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하며 ‘여순반란사건’ 대신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바꿔 부르자고 했던 것은 지금 와서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진상규명 운동의 첫 시작이 지역 이름 삭제였다는 것은 그만큼 여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낙원은 일찍이 이 점을 간파하고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낙원이 1962년 시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도 “(심사가 진행된) 중앙교까지 끌려온 무기력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sup>49)</sup> 그는 봉기군 선전부장 김상렬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 김낙원은 “이 고장 여수의 시민 쳐놓고 귀중한 형제 자매나 혹은 자녀 친척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신 또한 “그러한 입장에 서서 광풍에 쓰러진 수많은 원혼 앞에 명복을 빌며” 기록을 남겼다

47) 주철희, 『불량 국민들-여순사건 왜곡된 19가지 시선-』, bool Lab, 2013, 127쪽.

48) 「軍隊가 亂民에 呼應, 事件 性格에 公報處長 談」, 『京郷新聞』 1948.10.29.

49) 金洛原, 앞의 책, 1962, 73쪽.

고 했다.<sup>50)</sup>

이러한 정신은 1980년대 민주화 공간이 차츰 열리면서 여수지역에서 발간된 『여수·여천 향토지』(1982), 『여수·여천 발전사』(1988)에 서술된 대항 기억으로 이어졌다.<sup>51)</sup> 특히 『여수·여천 발전사』를 집필한 김계유(金鷄有)는 당시 지역 내 ‘명칭개정운동’에 발맞춰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사건’으로 규정짓고 봉기의 주체에서 지역사회를 분리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후 그는 진보적 역사잡지인 『역사비평』에 논문<sup>52)</sup>을 실어 여순사건을 학계를 비롯한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렇다면 김낙원으로 대표되는 지역 내 대항 기억이 민주화 공간에서 진상규명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힘은 무엇이였을까? 박정희는 1967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1969년 3선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70년대 들어 유신체제라는 파시즘적 전체주의를 만들어 냈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이 학생층 외에도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되어 가기는 했지만, 극도의 탄압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하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목소리는 침잠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1972년 ‘10월 유산’이 단행되었을 때 여순사건 관련 유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일제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옛날 포로수용소처럼 거제도에 수용을 한다”고 겁을 주었다.<sup>53)</sup> 한 유가족은 유신을 전후해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자 그때까지 미뤄졌던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경기도 모처로 본적을 바꾼 후 독립 분가해 호적을 정리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54)</sup>

50) 같은 책, 76쪽.

51) 여수·여천 향토지 편집위원회, 『여수 여천 향토지』, 1982; 金鷄有, 『麗水麗川發展史』, 반도문화사, 1988.

52) 김계유, 「현장증언 1948년 여순봉기-당시 일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여수인민위원회의 활동상과 ‘좌익협력자’에 대한 대량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17, 1991.

53) 한용희 구술, 「차마 말하지 못한 두 죽음」, 『70여 년, 하루하루가 목숨 같은 시간이어(증언집 4)』,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2, 316쪽. 이하 『증언집』이 반복될 경우 권수만 표기하고 발행 기관과 출간 연도는 생략.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유신 시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도 “명이 짧은게 죽었지 뭐”라고 답하시기 일쑤였다.<sup>55)</sup> 하루는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요?”라고 묻자, 어머니는 편지를 들고 산 밑에 가서 하루종일 우시다가 해가 저서야 돌아오셨다.<sup>56)</sup> 어머니는 괴로우실 때면 “하늘과 땅이 다 닳아버리면 좋겠다”<sup>57)</sup>고 말씀하시면서도,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 짚은 이야기를 안 해 주셨다.”<sup>58)</sup>

유가족들은 집에서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어릴 적부터 또래 집단이나 학교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놀려고 하면 친구 부모들이 ‘빨갱이 자식’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해서 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sup>59)</sup>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지들이 불리하면 빨갱이 자식”이라고 해서 싸우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sup>60)</sup> 하루는 경찰이 초등학교로 찾아와 ‘빨갱이 자식’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견디다 못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sup>61)</sup> 중학생 시절에는 사찰계 형사가 전쟁 이후 사라진 할아버지 소식이 없냐며 경찰서로 데려가 “무작허니” 때리기도 했다.<sup>62)</sup>

54) 김규찬 구술, 「단지 철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증언집 2)』,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0, 220쪽.

55) 이상호 구술,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세월이구먼」, 『한 풀고 눈 감으면 좋으련만(증언집 5)』,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2, 147쪽.

56) 김계수 구술, 「꿈에서라도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아버지」, 『증언집』 2, 146쪽.

57) 이수영 구술, 「하늘과 땅이 다 닳아버렸으면 좋겠다던, 어머니의 넋두리」, 『증언집』 5, 166쪽.

58) 박무길 구술, 「젊은 며느리 못 가게 헐라고 밤에는 시어머니하고 허리끈을 찢매고 잤다요」, 『몸서리 나는 세상이라 참말로(증언집 3)』,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1, 87쪽.

59) 이숙자 구술, 「맷돌 속 줌도 갈린, 그 세월을 굴러온 생명력」, 『나 죄 없응게 관찮을거네(증언집 1)』,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19, 32쪽.

60) 양시태 구술, 「씻겼어도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려」, 『증언집』 4, 162쪽.

61) 이기남 구술, 「다, 안고 살아야지」, 『증언집』 1, 72쪽.

62) 김연수 구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증언집』 2, 25-26쪽.

어릴 적 겪은 상처가 내면의 생채기였다면 여순사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진학, 군대, 취업 등을 앞두고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은 연좌제였다. 한 유가족은 돈은 없지만 공부가 하고 싶어 사관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필기시험 합격 후 신체검사 당일 귀가조치를 당해야 했다. 당시 방첩대가 주변 친척들을 찾아와 아버지의 활동을 캐묻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sup>63)</sup>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유가족은 사범대학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의식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입학할 거부당했다.<sup>64)</sup> 그나마 초등학교 선생님은 신원조회가 심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서야 교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sup>65)</sup>

연좌제는 소설가 정지아의 표현대로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 미래를 차압”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sup>66)</sup> 군인 혹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은 언감생심 말 그대로의 꿈일 수밖에 없었고,<sup>67)</sup> 공무원이 되기 위해 책을 들고 다니면 주변으로부터 “너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sup>68)</sup>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발령이 나지 않아 마음을 졸여야 했고,<sup>69)</sup> 공무원이 되어서도 보안감사에서 “아버지가 빨치산 해गत고 총살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결국에는 사직해야 했다.<sup>70)</sup> 연좌제의 굴레는 비단 공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중매로 만난 부인은 결혼 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은 자신의 집에서 “빨갱이 집안”이라 반대했었다는 말을 해줬다.<sup>71)</sup>

여순사건 유가족들은 이러한 경험을 거치며 자신의 부모 혹은 가족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sup>72)</sup>거나

63) 김규찬 구술, 앞의 글, 215-216쪽.

64) 이자훈 구술, 「생동백 몽둥이에 붉은 눈물 똑똑」, 『증언집』 5, 202쪽.

65) 한용희 구술, 앞의 글, 334쪽.

66) 정지아 구술, 「느그 아버지가 빨갱이람서」, 『증언집』 1, 301쪽.

67) 서장수 구술, 「하루 빨리 지역의 아픔이 치유되길」, 『증언집』 1, 111쪽.

68) 박병찬 구술, 「1948년 동짓달 스무날의 총성」, 『증언집』 1, 147쪽.

69) 김연수 구술, 앞의 글, 22쪽.

70) 한준희 구술, 「천석꾼 아들의 억울한 죽음」, 『증언집』 3, 269쪽.

71) 김계수 구술, 앞의 글, 148쪽.

“뭘 시험을 봐 썼냐?”<sup>73)</sup>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삶의 태도로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sup>74)</sup>거나 “나서지 말고 가만히 빠져 있어라”<sup>75)</sup>며 순응하며 살 것을 ‘강요’ 받았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몸서리가 난게 절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입 단아라”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다.<sup>76)</sup> 어릴 적부터 “저 새끼는 반란군 새끼라 틀려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야 했고,<sup>77)</sup> 그래서 “거꾸로 극우처럼 행동”하기도 했다.<sup>78)</sup>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작은 속삭임 속에서 사건의 진상이 전해지고 ‘저항’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아버지 기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너희 아버지는 이랬다”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친척들은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돌아가신 날의 모습과 “(아버지를) 찾으러 땀”던 일을 회상했다.<sup>79)</sup> 어느 날은 아버지와 함께 입산했던 동료가 찾아와 빨치산 얘기를 전해 주기도 했다. 당시 아버지는 그 동료에게 “나하고 이 산에서 굴을 파서 조국 해방이 될 때까지 살자”고 하셨다고 했다.<sup>80)</sup> 한 소년은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너희 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 할머니로부터 다락방에 숨겨 둔 아버지의 유품을 받아 보았다. 할아버지의 물건인 줄 알았던 철도원 모자와 가방은 사실 14연대 군인들을 태웠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한 기관사 아버지의 유품이었다.<sup>81)</sup>

유가족들이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주변에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에 조금씩 말을 하면서 아픔을

72) 권종국 구술, 「세상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증언집』 1, 192쪽.

73) 이찬식 구술, 「사진 속 아버지를 간절히 그리워하다」, 『증언집』 2, 187쪽.

74) 이기남 구술, 앞의 글, 87쪽.

75) 윤정근 구술, 「여순사건의 성격이 제대로 정립되었으면」, 『증언집』 5, 119쪽.

76) 백용송 구술, 「살아남아 살아내기, 그 이후」, 『증언집』 5, 96쪽.

77) 이영모 구술, 「사랑은 삶의 질곡에서도 사람꽃을 피운다」, 『증언집』 4, 243쪽.

78) 윤정근 구술, 앞의 글, 117쪽.

79) 장순자 구술, 「그렇게도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 아버지!」, 『증언집』 4, 283-284쪽.

80) 한용희 구술, 앞의 글, 322쪽.

81) 김규찬 구술, 앞의 글, 217쪽.

치유하고 연대와 공감의 틀을 마련해 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은 군사정부 하 ‘망각’을 강요당했던 세월 속에서 잠시 침잠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1980년대 민주화가 되었을 때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학교 다니면서 느낌으로 ‘아 우리가 이렇게 됐고 뭐 좀 이상한 것이구나. 떳떳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죠. (...) 그래도 약간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으로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 같구나’ 느꼈어요. (...) 이제 돌아가는 말도 그렇고 일이 흘러들어오는 말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구나. 떳떳하면서도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철들면서는 느꼈어요.<sup>82)</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1948년 여순사건 발발 이후부터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기억투쟁’을 살펴보았다.

분단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38선 너머 북한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국민’이라는 집단적 동일성을 추구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 의한 ‘비국민’을 양산해 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과 ‘여순 10·19’를 내부에 존재하는 ‘적’을 세상에 폭로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국가는 두 지역 전체를 ‘반란지구’로 설정하고, 그중에서 누가 ‘국민’이 될 수 있는지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학살을 통해 절멸되거나 인신의 구속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지만 ‘제주 4·3’과 ‘여순 10·19’는 사건의 성격상 연결되어 있고

82) 김명자 구술, 「외로움에 사무친 그 세월을 어떻게 말할까」, 『증언집』 4, 72-73쪽.



같은 ‘반란지역’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과정이 사뭇 달랐다. 양 사건 사이에는 정부 수립이라는 시간적 차이, 육지와 섬이라는 공간적 차이, 정식 군대와 민간인이라는 내용적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제주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나마 ‘국민’이 되기 위한 진입로가 열려 있었다면, 여순 지역은 인민군이 점령함으로써 그 길이 봉쇄되어 버렸다. 그로 인해 여순사건을 가슴 속에 묻어두거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망각해 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남 동부 지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해서 그 기억을 잊고 살지만은 않았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1963년 대선 과정에서 ‘빨갱이’로 몰리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지지를 보내줬다. 그 이면에는 박정희의 모습에 자신들을 투영하며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응어리를 혹여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의 표현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연좌제 폐지 등 선거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의 모습을 드러내자 1967년 대선에서는 투표로써 심판했다.

여순사건을 겪은 지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 혹은 심판한 것은 심연에 자리 잡고 있던 여순사건에 대한 기억들과 속삭임 속에서 전해진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다. 지역 내 향토사학자들은 국가의 일방적 선전과 매도에 맞서 작으나마 대항 기억들을 만들어 왔다. 그들이 남긴 균열의 편린들은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 본격적인 여순사건 연구가 진행될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아울러 유가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은 지역 내 공감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며 민주화의 공간이 열렸을 때 여순사건을 공론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여순 10·19’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의자’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주 4·3’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여순 10·19’는 조사나 연구의 양적·질적 성과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역 내 여순사건에 대한 논의가 너무 큰 그림 그리기에 익숙한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본다.

‘제주 4·3’은 지금까지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현재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배상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에 누워 있는 백비에서 보듯 ‘정명’의 문제를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여순사건은 ‘항쟁’으로의 성격 규정이나 ‘정명’의 문제가 먼저 선언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쌓은 성은 쉽게 무너져 내리듯 선입견을 배제하고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성과를 쌓아 올릴 필요가 있다.

역사는 짐이자 힘이다. ‘망각’을 강요당했던 세월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꿋꿋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비등잠’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참고문헌

1. 자료

『京報新聞』, 『國際新聞』, 『東光新聞』, 『東亞日報』, 『제주일보』, 『朝鮮日報』, 『한겨레』.

『月刊朝鮮』.

『국무회의록』.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나 죄 없으께 관찮을거네(증언집 1)』, 2019.

\_\_\_\_\_,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  
(증언집 2)』, 2020.

\_\_\_\_\_, 『몸서리 나는 세상이라 참말로(증언집 3)』,  
2021.

\_\_\_\_\_, 『70여 년, 하루하루가 목숨 같은 시간이어(증  
언집 4)』, 2022.

\_\_\_\_\_, 『한 풀고 눈 감으면 좋으련만(증언집 5)』,  
202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홈페이지(yosuicc.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info.nec.go.kr).

2. 단행본

김경재, 『김형욱 회고록—혁명과 이상』 2, 전예원, 1991.

金鷄有, 『麗水麗川發展史』, 반도문화사, 1988.

金洛原, 『麗水鄉土史』,麗水教育廳, 1952.

\_\_\_\_\_, 『麗水鄉土史』, 鄉土文化社, 196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여수·여천 향토지 편집위원회, 『여수 여천 향토지』, 1982.

- 李英石 編 『鄭求瑛 回顧錄 실패한 도전』, 中央日報社, 1987.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학사, 1991.
-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2022.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3.
- 주철희, 『불량 국민들—여순사건 왜곡된 19가지 시선』, bool Lab, 2013.
- 하우스만·정일화,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美軍 대위』, 한국문원, 1995.
-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비평사, 1979.

### 3. 연구 논문

- 강성호, 「1950~60년대 순천의 지역정치와 6·8부정선거 규탄운동」, 『남도문화연구』 40, 2020.
- 고성만, 「4·3위원회의 기념 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82, 2008.
- \_\_\_\_\_, 「4·3 과거청산과 ‘희생자’-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탐라문화』 38, 2011.
- \_\_\_\_\_, 「4·3 ‘희생자’의 변용과 활용—무장대 출신자의 과거청산 경험을 사례로」, 『사회와역사』 129, 2021.
- 곽경상, 「근현대 시기 순천의 성장과 도시계획의 전환」, 『學林』 48, 2021.
- 김계유, 「현장증언 1948년 여순봉기-당시 일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여수인민위원회의 활동상과 ‘좌익협력자’에 대한 대량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17, 1991.
- 김민환, 「전장(戰場)이 된 제주 4·3평화공원—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과 분열 된 연대」, 『경제와 사회』 102, 2014.
- 노영기, 「여순 사건과 구레—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주둔과 진압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8, 2005.
- 박찬식,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여순사건 6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2008.

- 손호철, 「1956년과 63년 대선 : 조봉암, 박정희 득표는 잔존 좌익의 지지였나?」, 『현대한국정치』, 사회평론, 1995.
- 이재승, 「묘지의 정치-명예회복과 인정투쟁을 둘러싸고」, 『통일인문학』 68, 2016.
- 이창현, 『1960년대 초 피학살자유족회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8.
- 임송자, 「전향의 반공주체 형성과 동원」, 『韓國史研究』 185, 2019.
- 주철희, 「여순사건과 지역의 기억」, 『歷史學研究』 56, 2014.
- \_\_\_\_\_, 「여순항쟁의 왜곡과 반공문화-‘반란실정 문인조사반’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3, 2017.
- 홍영기, 「여순사건 당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 현황-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선 10·19』 5,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2.

Abstract

Coexistence of ‘oblivion’ and ‘boiling’  
—Studying of the Memory Struggles of the people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after the ‘Yeosun 10 · 19 Incident’

Yea, Dae-yeol\*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 · 3 Incident’ was enacted in 1999, and the ‘Special Act on the 10 · 19 Yeosu·Suncheon Incident’ was enacted in 2021. This time gap reflects the history of the ‘Memory Struggle’ of Jeju and the eastern part of South Jeolla Province. The long journey toward the truth-finding of the two incidents is in line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the opportunity is about 20 years apart, such as the time of April 19 in 1960 and May 18 in 1980.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Memory Struggle’ of the residents of the eastern part of Jeonnam, targeting the period from after the ‘Yeosun Incident’ to before the fact-finding movement in the 1980s. The reason is to seek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should be done?” in histor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pecial Act’ is enacted and the ‘Committee on Yeosun Incident’ is activ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objectivity’ and ‘will’ through the ‘Memory Struggle’ of the local people before the full-fledged truth-finding movement in the 1980s. On the one hand, they had no choice but to live by ‘oblivion’ of the ‘Yeosun incident’, whether of their

---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wn will or not, but on the other hand, they had 'boiled' toward the point of severing under the water.

Key-words: 'Jeju 4·3 Incident', 'Yeosun 10·19 Incident', Making People, Guilt-by-Association, Counter Memory, Oral History.

논문투고일 2023. 2. 28.

심사완료일 2023. 3. 17.

게재확정일 2023. 3. 20.